

CEO Information

2013. 1. 9. (제879호)

2013년 해외 10大 트렌드

목차

1. 성장을 억누르는 선진국의 재정긴축
2. 글로벌 환율갈등의 파장 확대
3. 新경영리스크로 대두하는 글로벌기업 규제
4. 아시아를 둘러싼 美中의 통상주도권 경쟁
5. 모바일산업의 주도권 쟁탈전 심화
6. 어려움이 지속되는 新재생에너지산업
7. 제조업 투자유치전 본격화
8. 동북아 외교갈등 완화 모색
9. 중동 정정불안 확대
10. 고통분담을 둘러싼 갈등 심화

작성 : 박현수 수석연구원(3780-8251)
serihs.park@samsung.com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이종규 수석,
정영식, 권혁재, 최병삼 수석연구원,
김화년, 최명해, 방태섭 수석연구원,
김경훈 선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요약 》

2013년 해외 10大 트렌드의 키워드는 저성장, 갈등, 각자도생이다. 2013년은 세계경제의 성장활력이 부진한 가운데 선진국의 재정긴축 이행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저성장은 경제권, 국가, 계층 등에서 다발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한편, 각국의 상이한 경제상황으로 공조가 어려워 국가, 기업 등이 스스로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각자도생의 형국이 될 것이다.

2013년에는 ① 재정긴축으로 인해 선진국의 성장이 제약될 것이다. 긴축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긴 하겠지만 긴축 자체가 불가피해 유로존과 미국 등의 성장을 억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② 글로벌 환율갈등의 파장이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이 양적완화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선진국 간, 선진국과 신흥국 간 환율갈등이 심화되고 외환시장 개입, 자본유출입 통제 등을 넘어 통상갈등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③ 강화되는 글로벌기업 규제가 新경영리스크로 대두할 것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글로벌기업의 절세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고, 담합이나 특허남용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가 신흥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글로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아시아를 둘러싼 美中의 통상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오바마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에 중국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서면서 통상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⑤ 모바일산업의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될 것이다. 애플, 구글 등 주도기업이 새로운 모바일 기기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아마존 등 서비스 기업도 기기를 출시하고 중국기업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⑥ 新재생에너지산업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협약 교착, 정책지원 축소, 가스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⑦ 제조업 투자유치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선진국은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흥국은 탈중국 현상을 기회로 삼아 제조업 투자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⑧ 동북아 국가들은 외교갈등 완화를 모색할 것이다. 각국의 정치지형 변화로 외교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전면적 대결보다는 견제와 실용 추구를 병행하는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⑨ 중동은 정정불안이 확대될 것이다. 국제유가에 미칠 영향력이 가장 큰 이란 핵문제는 협상이 지연되고, 시리아 내전 등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⑩ 재정위기로 인한 고통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소득계층 간 갈등은 물론 국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 해외 10大 트렌드에 대한 평가 》

□ 2012년은 유로존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였으나, 전반적인 트렌드는 예측과 부합

- 유로존 위기로 재정긴축과 함께 성장률이 둔화되어 통상분쟁이 확산되고 기업경쟁도 심화
- IT 강자의 영역 확장 예상은 방향이 맞았지만 미디어, 유통 등 일부 분야에서의 영역 확대에 그쳐 확대의 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미흡

2012년 해외 10大 트렌드와 실제 상황

구분	SERI가 예측한 트렌드	2012년 실제 상황	평가
경제	① 선진국의 긴축 본격화	- 남유럽 재정위기국 중심으로 긴축 시작 - 미국 등도 긴축 논의가 본격 진행	○
	② 신흥국의 성장 감속	- 수출 부진, 금융불안으로 성장률 하락 - 특히 BRICs는 구조적 문제로 회복 지연	○
	③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 파국은 회피했으나 위기 해소는 미흡 - 국채 매입 등 시장안정 대책과 은행동맹 등의 논의는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이 필요한 상태	○
정치	④ 주요국의 정권 시프트	- 프랑스, 일본 등 정권교체 - 중국 5세대 지도부 출범	○
	⑤ 통상분쟁의 다면화	- G2 간 환율마찰 등 통상분쟁이 지속 - 중국과 신흥국 간 무역분쟁도 확산	○
	⑥ 소셜 파워의 영향력 확대	- SNS 이용자 및 영향력 증가	○
산업 경영	⑦ 불황 극복형 기업 경영	- 글로벌기업의 구조조정 확산	○
	⑧ 글로벌 인재 경쟁 심화	- 신흥국기업의 인재 경쟁 심화	○
	⑨ IT 강자의 영역 확장	- 미디어, 유통 등 일부 분야에서 영역 확대	△
	⑩ 新자원전쟁 확산	- 셰일가스와 곡물 등 주목받지 않았던 자원에 대한 개발 및 M&A 확대	○

주: ○는 전망과 실제 상황 일치, △는 트렌드는 일치했지만 정도의 차이, ×는 불일치

《 2013년 해외 10大 트렌드 》

2013년 해외 트렌드의 키워드는 '저성장', '갈등', '각자도생'

- 세계경제의 위기감은 다소 진정되었지만 저성장이 장기적 추세로 고착
 - 선진국은 긴축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 지속이 불가피하여 투자 및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저성장이 장기화
 - 양적완화정책 확대는 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전망
-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지역, 기업 등의 협력 및 공조 체제가 약화되고 각자 생존을 도모하는 형국
 -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와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환율, 통상,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확산
 - 동아시아와 중동 등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계층·지역 간 갈등도 고조

	 저성장	 갈등	 각자도생
경제	① 성장을 억누르는 선진국의 재정긴축	② 글로벌 환율갈등의 파장 확대	③ 新경영리스크로 대두하는 글로벌기업 규제
		④ 아시아를 둘러싼 美中の 통상주도권 경쟁	
산업 경영	⑥ 어려움이 지속되는 新재생에너지산업	⑤ 모바일산업의 주도권 쟁탈전 심화	⑦ 제조업 투자유치전 본격화
정치 사회		⑧ 동북아 외교갈등 완화 모색	
		⑨ 중동 정정불안 확대	
		⑩ 고통분담을 둘러싼 갈등 심화	

1. 성장을 억누르는 선진국의 재정긴축

▶ 선진국의 재정긴축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

- 유로존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
- 재정긴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 및 투자가 위축

□ 2013년에도 선진국의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

- [유로존] 경기침체 심화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긴축안이 수정될 가능성¹⁾
 - 이탈리아(2월), 독일(9월) 등에서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긴축 조건 및 방식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 불만이 고조되는 스페인도 ECB 등에 긴축 완화를 요구
- [미국]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정부지출 감축방안과 채무한도 증액 이슈 등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재차 충돌할 것으로 예상²⁾
 - 「예산통제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정부지출 자동 삭감 조치를 2개월 유예한 가운데 공화당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등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과 미국은 긴축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

- [유로존] 회원국들은 EU 및 ECB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이미 합의된 긴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입장
 - 정부지출 축소, 세금 인상,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축소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전년보다 0.7%p 감축할 계획

¹⁾ 그리스는 이미 긴축목표 달성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

²⁾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긴축을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과 긴축유예가 장기성장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

- [미국]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 긴축을 지속

- 2012년 대비 재정적자 감소 규모는 2,264억달러이며, 이 경우 GDP 대비 1.2%의 재정긴축이 이루어지는 셈(IMF, WEO.)

□ 2012년에 비해 극단적인 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은 낮으나, 재정긴축이 지속적으로 실물경제를 압박

- [유로존]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긴축 → 경기침체 → 세수감소 → 재정적자 확대 → 긴축목표 달성 차질'이 반복(긴축의 덫)³⁾

- 남유럽 4개국은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12년보다 1.2%p 더 감축할 계획인데, 그러나 성장률은 -1.8%에 그칠 전망(4개국 단순평균)

- [미국] 재정긴축 효과가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압도

- 금리가 제로 수준이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하여 양적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으로 인한 경기위축은 기존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⁴⁾



주: 1) 유로존과 미국의 단순평균치 2) 불확실성지수: 100 이상은 불확실성 지속을 의미
자료: IMF, WEO.; Eurostat

³⁾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실패와 긴축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 표출은 경기심리를 더욱 위축

⁴⁾ 미국의 재정지출 승수는 약 1.6으로 고강도 재정긴축은 실물경제를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 (美 경제자문위원회)

2. 글로벌 환율갈등의 파장 확대

- ▶ 글로벌 환율갈등이 선진국 간, 선진국과 신흥국 간으로 확산되고 심화
-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글로벌 환율갈등의 불씨로 작용
 - 환율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공방으로까지 확산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내수경기 회복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양적완화정책⁵⁾을 더욱 강화할 전망
 - 재정긴축이 불가피하고, 정책금리는 제로 수준이어서 추가 인하가 어려워 거의 유일한 경기부양 수단인 양적완화정책 추진이 불가피
 -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은 국채매입 등 무제한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일본중앙은행은 보다 공격적인 양적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아베 내각은 엔화 강세 방지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중앙은행에 물가목표치 상향 조정(1% → 2%)을 강력하게 권고
-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을 놓고 신흥국뿐 아니라 일부 선진국도 자국에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하여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 통화 강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거세게 비판
 - 일본은 미국과 유럽을 향해 각각 달러화와 유로화 가치를 높이라고 주문⁶⁾하면서 미 연준과 ECB의 양적완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선진국 내부에서도 갈등이 고조될 전망
- 2013년에는 2010년과 달리 글로벌 환율갈등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⁷⁾

⁵⁾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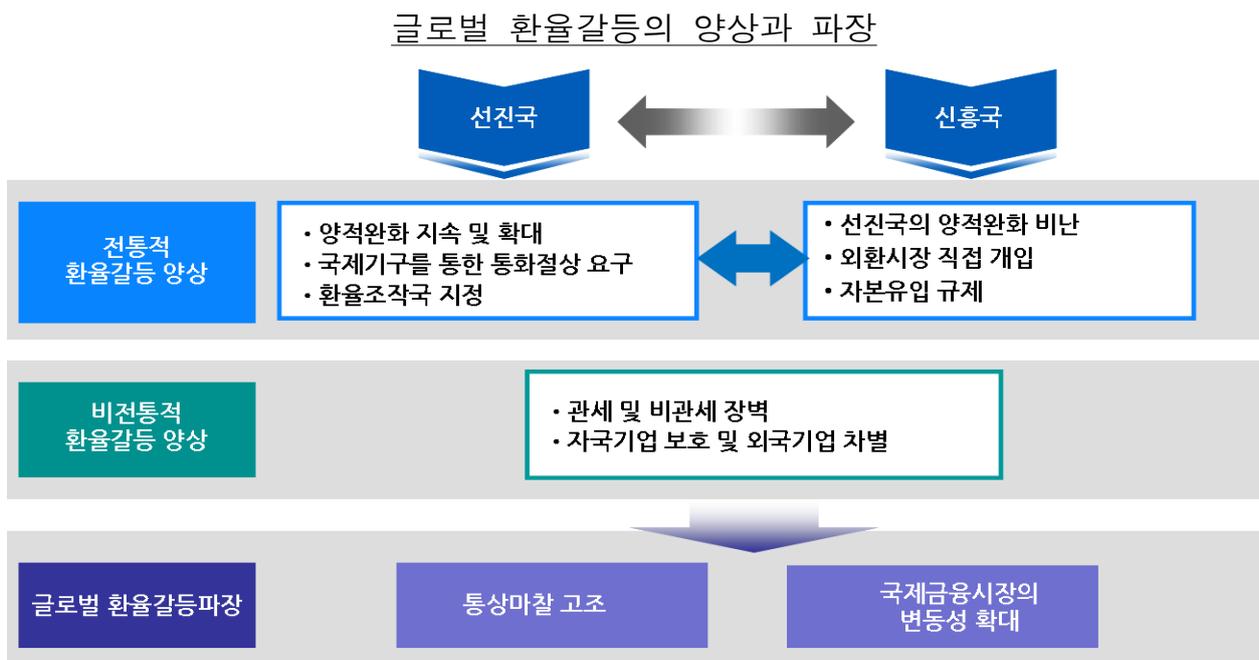
⁶⁾ 2012년 12월 28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미국은 달러화 강세를 유도하고, 유로화도 강세를 유지할 것" 주문

⁷⁾ "2012년 환율전쟁이 가짜였다면, 2013년에는 진짜 환율전쟁이 일어날 것"(Mervyn King Is Right To Fear Currency Wars (2012.12.11.). *The Wall Street Journal.*)

- 2010년 하반기에도 글로벌 환율갈등이 고조되었으나,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점점⁸⁾을 찾으면서 진정
 - 당시에는 신흥국이 선진국과 달리 고성장세여서 선진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가능
- 2013년에는 신흥국 경제가 2010년과 달리 성장이 둔화되어 선진국의 통화절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 환율갈등은 통화절상 요구, 외환시장 개입, 자본유출입 통제 등을 넘어 통상갈등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전망

- 선진국은 신흥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카드로 압박하고, 신흥국은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보호주의 등으로 맞붙
 -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브라질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9~10월 중 200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전격 인상했고, 아르헨티나도 반덤핑, 수입사전허가제 등을 실시



⁸⁾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은 유연한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약속했으며 선진국은 과도한 양적완화를 경계하고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조치를 용인

3. 新경영리스크로 대두하는 글로벌기업 규제

- ▶ 선진국 등 각국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로 글로벌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 무역뿐 아니라 조세, 경쟁법 등 다방면에서 기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글로벌기업은 현지법 준수, 조세전략 재검토 등 대응노력을 본격화할 전망

- 선진국 정부는 세수 확보⁹⁾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글로벌기업의 절세전략에 제동을 걸기 시작
- 재정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글로벌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
 -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스타벅스¹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탈리아도 구글이 2.4억유로 이상 탈세한 혐의를 적발
 - 정부부채 축소가 시급한 美 행정부와 의회도 글로벌기업의 세금 탈루¹¹⁾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을 논의 중
 - 글로벌기업에 대한 조세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G20 차원의 국제공조도 추진
 - 2013년 2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OECD의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카르텔(가격담합)이나 독점적 지위 남용, 특허 남용 등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규제도 강화

⁹⁾ 영국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규제를 통해 연간 20억파운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

¹⁰⁾ 영국에 735개 매장을 가진 스타벅스는 1998년 이래 31억파운드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액이 860만파운드에 불과

¹¹⁾ 애플은 2011년 글로벌 이익이 총 340억달러에 달했으나 실제 세금 납부액은 33억달러에 불과했으며, 24억달러의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기업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국제 카르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 건당 과징금 부과액이 매년 증가 추세
 - 미국의 反트러스트 벌금부과액(억달러): 5.6('10) → 5.2('11) → 11('12)
- EU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EU집행위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
 - EU집행위는 유럽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들의 경쟁법 위반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¹²⁾
- 최근에는 특히 남용에 따른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도 증가 추세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2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의 스마트폰 필수 표준특허 남용 여부를 조사

□ 글로벌기업 규제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확산되는 양상

- 신흥국 정부도 선진국의 글로벌기업 규제를 모방하여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 규제를 강화
 - 중국, 인도는 글로벌기업의 이진가격 조작행위를 규제할 방침

□ 글로벌기업들은 기업규제 증가에 대한 대응노력을 본격화할 전망

- 글로벌 기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현지법 준수, 글로벌 조세전략 재검토 등 규제피해 최소화 노력을 강화

글로벌기업 구글의 수난(受難)

- ▷ 구글은 영국(의회 청문회 출석), 프랑스(18억달러 세금 추징), 이탈리아(국세청 세무조사), 호주(세금 탈루 혐의) 등에서 조세규제에 직면
- ▷ 또한 反독점 위반행위를 이유로 EU집행위로부터 글로벌 이익(총 379억달러)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되자 자구책으로 反독점 개선안을 제시

¹²⁾ EU집행위는 2012년 12월 5일 TV 및 컴퓨터모니터용 브라운관(CRT)을 생산하는 7개 업체의 카르텔 위반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4.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

4. 아시아를 둘러싼 美中의 통상주도권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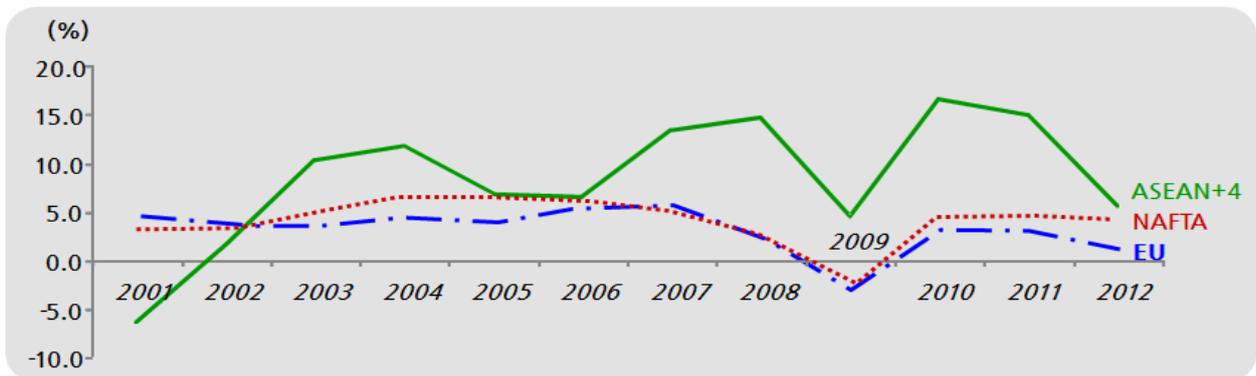
- ▶ G2 간 대결이 무역분쟁에서 아시아 경제질서 구축경쟁으로 확산
 - TPP와 RCEP라는 상이한 경제협력체 경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

□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위기 이후 북미, 유럽 등에 비해 높았던 아시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는 세계의 소비 및 투자시장으로 부상

- 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13~2017년 평균, OECD):
중국 8.3%, 인도 6.4%, 아세안 5.5%

아시아 주요국과 북미, 유럽 경제성장률 비교



주: 1) 지역별 성장률은 GDP 가중평균

2) 아시아 주요국은 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인도의 14개국(ASEAN+4)

자료: Global Insight

□ 그러나 역내 통합이 미진한 아시아 경제를 둘러싸고 G2의 경쟁이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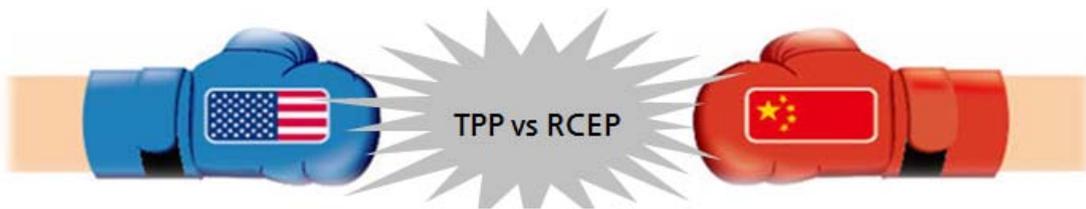
- 북미나 유럽보다 역내 통합 강도가 약한 아시아에서 통상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G2는 각각 자국 중심의 경제협력체 건설 경쟁에 주력

- 미국이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¹³⁾을 추진하자,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¹⁴⁾을 진행하며 대치

¹³⁾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 호주, 멕시코, 베트남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2009년 이래 15차례 협상이 진행

¹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과 한, 중, 일, 인도, 호주 등 16개국이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 특히, G2가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아시아 통상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2013년은 본격적 주도권 경쟁의 원년이 될 전망
 -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TPP 협상참여를 더욱 압박하는 등 TPP 외연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2011년 TPP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농업 및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내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참여를 미루는 상황
 - 중국은 급성장하는 자국 시장을 무기로 인접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식 개방모델의 역내 확산 저지에 주력
- 美中이 각각 추진하는 경제협력체 구축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
 - 평행선을 달리는 美中과 달리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은 G2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양자택일의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아세안의 對中, 對美 수출 비중(2011): 중국 11.5%, 미국 8.5%
 -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美中이 각각 주도하는 상이한 경제협력체가 경쟁하는 복잡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멕시코, 칠레, 베트남 등 11개국 · 인구 약 6억, GDP 23.4조달러(2011년) 	참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인도 등 16개국 · 인구 약 34억, GDP 20조달러(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무역 및 투자 장벽의 완전한 철폐 추진 · 아시아보다 아태지역 차원의 통합 주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산업별 점진적이고 단계적 개방 (중국 및 아세안 개도국 입장 반영) · 아시아 인접국부터 경제통합 선호

5. 모바일산업의 주도권 쟁탈전 심화

- ▶ 글로벌 모바일산업은 ① 주도기업의 라인업 확대, ② 서비스기업의 기기 출시, ③ 중국기업의 상위권 진입으로 경쟁구도의 지각변동이 진행
- 스마트기기 시장이 대폭 성장하고 중저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주도기업의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 구글, 애플 등은 신형 및 중저가 모바일기기, TV 등 전방위로 제품군을 확대

- 스마트기기 시장을 스마트폰·태블릿PC 중심에서 패블릿¹⁵⁾, 스마트PC¹⁶⁾ 등으로 세분화하고 중저가 제품도 출시

- 패블릿: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아마존 킨들파이어, 구글 넥서스7 등
- 스마트PC: 삼성전자 아티브, MS 서피스 등

- 애플은 자체 개발, 구글은 제조사 라이선싱을 통해 TV 사업을 강화

-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 등 혁신제품을 발표해온 애플은 2013년 기존 셋톱박스 형태가 아닌 완제품 TV를 출시할 전망

□ [서비스기업의 기기 출시]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중저가 기기 출시로 자체 생태계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돌입

- 강점을 보유한 서비스 및 콘텐츠에 최적화된 모바일 기기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

- 아마존은 '킨들폰' 출시로 태블릿PC 킨들파이어와 자체 콘텐츠 및 앱 마켓으로 구축한 생태계를 한층 강화

- 서비스와 콘텐츠가 주요 수익원이므로 기기를 저가에 공급 가능¹⁷⁾

¹⁵⁾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중간 크기인 5~7인치 기기로 '폰(Phone)'과 '태블릿(Tablet)'의 합성어

¹⁶⁾ 키보드 탈착이 가능한 태블릿PC로 태블릿PC와 노트북PC의 중간 형태

¹⁷⁾ 아마존은 2011년 킨들파이어를 출시하면서 1대당 10달러의 손해를 봤지만 전자책 등 콘텐츠 판매를 고려하면 1대당 136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Amazon Kindle Fire: More Profitable Than Expected? (2012.1.18.). *Forbes.*)

- [중국기업의 상위권 진입] 중국기업이 거대 내수시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성장세를 지속하며 애플과 구글 진영을 위협
 - 화웨이와 ZTE는 세계 스마트폰 업체 순위가 각각 2012년 7위, 8위에서 2013년에는 노키아, RIM 등이 부진한 가운데 3위와 4위로 급상승할 전망
 - 중국기업들은 최근 하이엔드 제품도 출시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스마트폰의 핵심칩인 AP를 직접 생산할 정도로 기술력도 우수
 - 중국기업이 지속해서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노키아 등을 인수할 경우 산업의 경쟁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¹⁸⁾

- 스마트기기의 다양화 및 저가화로 시장이 대폭 성장하는 한편, 중저가 시장 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
 - 주도기업들이 전방위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저가 시장으로 진입하는 서비스기업 및 중국기업과 경쟁
 - '50달러 스마트폰' 등장 등 스마트기기 가격이 하락하며 개도국으로 시장 저변이 확대

모바일산업의 경쟁구도 전망



¹⁸⁾ 노키아 인수戰에 화웨이가 MS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2013 in Mobile. (2012.12.30.). Forbes.)

6. 어려움이 지속되는 新재생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① 기후변화협약 교착, ② 재정위기로 인한 정책지원 감소
 ③ 셰일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가격 하락 등으로 2013년에도 부진 지속
 - 태양광과 풍력터빈 등의 과잉공급과 바이오연료 생산원료의 고비용 문제 지속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약화, 재정지원 감소 및 보호주의 강화, 기술 패러독스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어려움이 가중

- 2012년 12월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캐나다 등 교토체제 참여국의 탈퇴로 협상이 퇴보¹⁹⁾
- 주요국은 재정위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지원을 줄이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교역도 위축²⁰⁾
- 셰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이 확대되면서 석탄과 가스 등 화력 발전 원료 가격이 하락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영향²¹⁾
- 2012년 가스와 석탄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30%, 23% 하락

'기술 패러독스'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위축

▷ 舊산업의 기술 발전속도가 新산업보다 빨라 신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현상
 - 구산업에서 셰일가스 개발 기술 발달 → 가스 및 석탄 가격 하락 → 화력발전 확대 → 신산업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둔화

□ 2013년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

- 중국은 2012년 말 공급과잉에 빠진 태양광 패널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M&A와 파산신청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¹⁹⁾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형식적으로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침

²⁰⁾ 스페인은 풍력발전소 신규 건설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2012년 11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

²¹⁾ IEA (2011). World Energy Outlook 2011(Special Report): Are We Entering a Golden Age of Gas?

7. 제조업 투자유치전 본격화

- ▶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
- 선진국은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신흥국은 탈중국 현상을 기회로 삼아 제조업 투자유치를 강화

□ [선진국]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수립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이 고용 안정을 유지하며 비교적 선방하자 선진국들이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
 - 2012년 10월 EU집행위는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新산업정책을 제시
 -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리쇼어링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²²⁾

□ [신흥국]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들이 글로벌 제조업체들을 적극 유치

- 임금 상승과 위안화 강세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체의 탈중국 현상이 확산되면서 이를 기회로 투자 유치하려는 신흥국 간 경쟁이 심화
 - 캄보디아, 미얀마 등 임금이 낮은 신흥국들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설치하거나 확대
 - 브라질 등 선발 신흥국들은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중공업 분야에서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모색

□ 제조업 투자유치 경쟁 심화로 서플라이체인의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

- 기업은 각국의 투자유치정책을 고려하여 생산기지 재배치 전략을 추진
 - 폭스콘은 최근 브라질, 멕시코, 터키에서 투자를 단행했고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²³⁾

²²⁾ The White House (2012). 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

²³⁾ Foxconn challenged as global reach grows. (2013.1.3.). *Financial Times*.

8. 동북아 외교갈등 완화 모색

- ▶ 동북아 강대국의 국내 정치지형 변화로 외교적 불확실성이 증대
-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中日 간 민족주의 충돌 등 역내 갈등 양상은 지속
 - 전면적 대결보다는 견제와 실용 추구를 병행하는 조심스런 외교적 행보가 예상

□ 국내 정치지형 변화로 동북아 외교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

-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정부는 1기에서 추진한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며 중국 견제에 나설 전망
 - 미 의회도 센카쿠 열도의 일본 관할권 인정 및 對대만 F16-C/D 전투기 판매를 허가하는 「2013 국방수권법」을 통과(2012.12.)
- '중화민족 부흥' 과제를 계승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와 '강한 일본'을 모토로 집권한 일본 자민당 정권의 민족주의적 충돌 가능성이 잠복
 - 양국 모두 센카쿠 열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타협 불가를 거듭 천명

□ 전면적 대결보다는 견제와 실용 추구를 병행하는 외교적 행보가 예상

- 중국은 美日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적 연대 형성이라는 우회전략을 병행할 전망
 - 18차 당대회에서 국제지위에 걸맞은 군사력 구비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중국경제 성장의 혜택이 주변국에 파급되도록 할 것임을 강조
-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美日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같은 반발을 초래할 정도로 중국 국민감정을 훼손하는 행보는 자제
 -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美日 동맹관계가 일본외교의 기축'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센카쿠 공무원 상주 계획을 연기

9. 중동 정정불안 확대

- ▶ 이란 핵문제, 시리아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위험이 확산
- 협상 난항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유가 하락을 제한
 -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에도 시리아 내전 종식 및 정치 안정은 불확실

□ 2013년 중동정세는 이란 핵문제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시리아 내전 악화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재충돌 우려 등으로 불안이 고조

- 국제유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이란 핵문제는 이란이 6월 대선 전후까지 핵시설 사찰 불용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협상이 지연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은 2012년 4월부터 이란과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난항을 거듭하며 이스라엘의 불만이 고조
- 시리아는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대리전²⁴⁾ 양상이 가열되면서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이 불투명하여 중동정세 불안이 가중²⁵⁾
- 2012년 11월 팔레스타인이 유엔 비회원 옵저버 국가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위험이 증대
 -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격을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2005년 이후 5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

□ 저성장과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정불안이 유가 하락을 억제

- 이란 핵문제 등 중동분쟁이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할 소지
 -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 2012년 3월 14일 두바이油 가격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124.2달러/배럴까지 상승

²⁴⁾ 미국 등 서방측은 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 이란 등은 정부군을 지원

²⁵⁾ 리비아, 이집트와 비슷한 시기에 촉발된 시리아 사태는 2011년 1월 반정부 시위 발생 이후 동년 3월 내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화

10. 고통분담을 둘러싼 갈등 심화

- ▶ 재정위기 대응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 복지혜택 축소와 부유층 증세에 따른 소득계층 간 갈등이 확산
 - 재정지원국과 위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도 격화

□ 선진국에서는 재정긴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 간 갈등이 확대

- 그리스, 스페인²⁶⁾ 등 남유럽 재정위기국에서는 연금과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2013년 긴축예산에 대한 저항이 지속
 - 유럽 전역으로 긴축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2012년 11월 14일에는 프랑스, 벨기에 등을 포함한 유럽 23개국에서 시위가 발생
-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정책으로 부유층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
 - 프랑스는 사회당 정부의 증세정책에 반발한 부유층의 '세금망명'이 확산되고 있으며²⁷⁾, 독일, 영국, 스페인 등도 부유층 증세를 검토
 - 미국도 진통 끝에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가까스로 합의

□ 저성장과 재정위기 장기화로 유로존의 재정지원국과 위기국 간 갈등을 비롯하여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

-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은 내부적으로 위기국 재정지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수혜국에서도 지원조건 등에 대한 반발이 커질 전망
- 재정위기를 계기로 지방정부 분리독립 움직임이 더욱 강하게 표출
 - 경제상황이 나은 스페인의 카탈루냐, 벨기에의 플랑드르 등은 2012년 선거결과²⁸⁾에 따라 2013년에 분리독립 움직임을 강화할 전망

²⁶⁾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정부가 긴축정책을 유지하면 스페인의 빈곤율이 현재 27%에서 10년 내에 40%로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Protests as Spain Passes Crisis Cutbacks. (2012.12.20.). AFP.)

²⁷⁾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프랑스 정부는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의 부유층 증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

²⁸⁾ 2012년 10월 벨기에 지방선거에서 부유한 플랑드르의 독립을 주장하는 NVA가 승리했으며, 2012년 12월 재정이 튼튼한 카탈루냐 주 양대 정당이 2014년 분리독립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12. 28	1. 2	1. 3	1. 4	1. 7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070.60	1,063.50	1,061.50	1,063.60	1,063.70
	엔/달러(뉴욕시장)	86.360	86.655	87.345	87.460	88.250
	달러/유로(뉴욕시장)	1.32360	1.31910	1.31840	1.30420	1.30720
금리	회사채(3년AA-, %)	3.29	3.30	3.25	3.23	3.25
	국고채(3년, %)	2.82	2.82	2.77	2.74	2.76
	CD (91일, %)	2.89	2.89	2.88	2.88	2.87
	LIBOR (3개월, %)	0.30800	0.30500	0.30500	0.30500	0.30500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107.99	107.61	107.72	107.46	106.66
	WTI(S, \$/배럴)	90.89	92.99	92.83	93.05	93.27
	CRB 현물가격지수	483.35	483.20	483.15	483.35	..
주가지수(KOSPI, 종가)		1,997.05	2,031.10	2,019.41	2,011.94	2,011.25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66	61	60	59	60

< 월별 지표 >

	2011년	2012년	2012.8월	2012.9월	2012.10월	2012.11월	2012.12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¹⁾	7.0	..	0.2	0.7	-0.8	2.9	..
평균가동률	79.9	..	73.7	75.2	75.9	77.4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3	..	0.8	2.6	0.9	2.0	..
실업률	3.4	..	3.0	2.9	2.8	2.8	..
실업자(만명)	85.5	..	76.4	75.2	71.8	71.0	..
총취업자 수(만명)	2,424.4	..	2,485.9	2,500.3	2,506.9	2,494.1	..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2	2.0	2.1	1.6	1.4
생산자물가 상승률	6.1	..	0.3	1.0	0.2	-0.2	..
생활물가 상승률	4.4	1.6	0.6	1.7	1.6	1.0	0.7
수출(억달러, FOB) ²⁾	5,552.1	..	430.5	454.2	470.8	477.8	..
(증감률)	(19.0)	..	(-6.0)	(-2.3)	(1.0)	(3.8)	..
수입(억달러, CIF)	5,244.1	..	410.4	425.2	433.9	434.0	..
(증감률)	(23.3)	..	(-9.6)	(-6.1)	(1.6)	(0.9)	..
외환보유액(억달러)	3,064.0	3,269.7	3,168.8	3,220.1	3,234.6	3,260.9	3,269.7

1) 통계청 (2012. 12. 28.) “201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2. 12. 17.) “2012년 11월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 분기 지표 >

	2010년	2011년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2012년 3분기
GDP 성장률 ¹⁾	6.3	3.6	3.6	3.3	2.8	2.3	1.6
민간소비	4.4	2.3	2.1	1.1	1.6	1.1	1.5
설비투자	25.7	3.7	1.2	-3.3	8.6	-3.5	-6.0
건설투자	-3.7	-5.0	-4.0	-2.1	1.5	-2.1	-0.1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51.8	45.4	47.5	45.4	44.2	46.6	43.6
SERI 경제행복도지수 ²⁾ (연간은 연말 기준)	0.658	..	0.693
개인금융자산(조원) ³⁾	2,187.9	2,303.4	2,234.4	2,303.4	2,365.3	2,384.8	2,449.9
개인금융부채(조원)	1,016.6	1,103.5	1,074.0	1,103.5	1,106.9	1,121.4	1,135.4
채정수지(조원)	16.7	18.6	16.8	18.6	-11.3	-11.5	-3.7
경상수지(억달러) ⁴⁾	293.9	265.1	69.0	115.1	25.6	111.9	147.1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⁵⁾	3,594	3,984	3,948.4	3,987.2	4,116.6	4,157.7	4,193.8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2010년 4/4분기부터 소득분배 부문 하위지수 산정법 개정으로 과거 자료와 상이

3)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4)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5)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10년	2011년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2012년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¹⁾	3.0	1.7	1.3	4.1	2.0	1.5	2.0
	실업률 ²⁾	9.6	9.0	9.0	8.5	8.2	8.2	7.8
	소비자물가 ²⁾	1.6	3.2	3.9	3.0	2.7	1.7	2.0
일본	GDP 성장률 ¹⁾	4.4	-0.7	9.5	-1.2	5.2	0.3	-3.5
	실업률 ²⁾	5.1	4.6	4.2	4.5	4.5	4.3	4.2
	소비자물가 ²⁾	-0.7	-0.3	0.0	-0.2	0.5	-0.2	-0.3
유로 지역	GDP 성장률 ¹⁾	1.9	1.5	0.1	-0.3	0.0	-0.2	-0.1
	실업률 ²⁾	10.1	10.2	10.4	10.7	11.0	11.4	11.6
	소비자물가 ²⁾	1.6	2.7	3.0	2.7	2.7	2.4	2.6
중국	GDP 성장률 ¹⁾	10.4	9.2	9.1	8.9	8.1	7.6	7.4
	실업률 ²⁾	4.1	4.1	4.1	4.1	4.1	4.1	4.1
	소비자물가 ²⁾	3.3	5.4	6.1	4.1	3.6	2.2	1.9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